

대학과 산학협력

- 산학협력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 발전 추구 -



성 경 통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지금 우리는 국민소득 1만 불의 늪에서 벗어나 2만 불 시대의 선진한국을 향해 전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선진국의 문턱에서 주저앉은 지난 시간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시련이었지만, 또한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간 우리는 요소투입형 성장 전략의 허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고, 대대적인 구조조정 등 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증진에 진력을 해왔다. 다행히도 이제 1만 불의 턱을 다시 넘어섰고, 1만 5천 불 그리고 2만 불 시대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소득 1만 불에서 1만 5천 불의 달성은 산학협력 하나만 잘해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해 2만 불 달성을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산학협력은 대학 등이 국가,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 인력 양성,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및 산업 자문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 산업체 수요와 미래 산업 발전에 부응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일이다. 1980년대까지는 출연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산학협력 사업들이 왜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 학자, 전문가 등이 다각적인 진단을 내리고 수많은 처방전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시원한 답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우리는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혁신 주체들 각자의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기업들은 자체 연구개발 능력이 충분하여 대규모 자원 투입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독자 개발하고 있다. 자체 개발하거나 그렇지 못한 것은 외국에서 사오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기술을 공동 개발하거나 대학과 협력할 필요를 그다지 느끼지 못한다. 이와

문의 질적 수준 저하, 학술 공동체 내의 분열과 긴장감 상승, 대학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손상 우려 등에 대하여는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기초학문 및 인문사회분야에 대한 보강 지원을 통해 학문간 내적 형평성 유지에도 균형감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기술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학 기술 수준 자체에 대한 불만족, 교수 발명자들의 기술에 대한 지나친 집착, 기술 발명 이후의 과정인 부품 소재 개발, 디자인 개발, 마케팅 등에 대한 배려 미흡 등 기술 공급자 측에 대한 불만이 많다. 또한 기술 가치의 평가 측면에서도 보면, 융·복합 기술에 대한 전문가 부족, 기술이외의 법률·경영지식 전문가 부족, 평가 모델 및 정보 인프라 미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기술 거래에 있어서도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기술이 전전담조직은 아직 초기상태이고, 중소기업청과 과기부, 산자부 등이 기술이전컨소시엄 또는 RTTC 등 공공기술 이전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미한 형편이다. 민간 기술거래업들도 수익성 저조 등으로 활성화가 잘 안되는 실정이라고 한다.

한편 기술공급자인 교수 연구자 측에서 보면, 대학 보유기술의 권리화, 즉 특허 출원 및 특허의 유지 관리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분은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융통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기술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반면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는 공적인 자금이 투입된 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음성적 거래에 대해 감각이 무뎠던 점이 없지 않다. 최근

산학협력 참여 주체들의 입장에서의 상황 인식도 어디까지나 기관들의 입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산업체들 중에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기술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들도 흔치 않다. 더욱이 국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반대로 많은 중소기업들은 혁신 역량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신기술 상품에 승부를 걸겠다는 의욕은 물론 능력도 없는 실정이다. 한편 대학은 어떠한가? 정부가 산업 기술재단, 과학재단 및 학술진흥재단 등을 통해 부지런히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사업들을 펼치고 있으나, 그 성과인 배출 인력과 연구 결과물이 시장의 수요에 얼마나 즉응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기가 쉽지 않다. 교수들의 산학협력 참여 실적이나 특허 보유건수 등은 아직도 교수 임용이나 각종 평가에서 학술 논문만큼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Academic Capitalism의 폐해인 학

대학의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발명신고와 보상 등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적 성숙과 경제발전에의 기여를 감안할 때, 학자 발명자들의 발명신고 문화는 정착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기술이라는 상품 자체의 속성상 공급자들이 끊임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업데이트 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비즈니스 경쟁이 치열한 기술 수요자들이 자기의 취약 기술 분야나 긴급한 기술 수요분야를 공개적으로 수배할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학협력 참여 주체들의 입장에서 상황 인식도 어디까지나 기관들의 입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산업체들 중에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곳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기술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들도 흔치 않다. 더욱이 국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설사 국내 기술을 찾는다 하더라도 요소 기술보다는 시스템 기술, 즉 모두 함께 구비되어 있어 활용하기 좋은 기술을 선호한다. 이같이 기업은 마케팅과 연결되지 않으면 지원도 투자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의 제고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요, 대학들의 살 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산학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과실은 대학 구성원과 산업체가 일차적 수혜자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골고루 확산되어 경제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다.

창의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한 인력 양성, 핵심 원천 기술의 개발을 위한 노력과

사회 전체적인 지원, 개발된 기술을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술 평가를 통해 최종 수요자에게 적절하게 거래되게 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구축, 기술이전이 벤처 창업으로 이어지고, 명멸하는 벤처들이 혁신주도형 중소기업으로 살아남게 하는 기술 금융시장의 활성화 등이 혁신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의 전형이라 할 것이다. ■■

효과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 성과의 제고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요, 대학들의 살 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산학협력을 통해 얻어지는 과실은 대학 구성원과 산업체가 일차적 수혜자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골고루 확산되어 경제 체질을 강화시킬 수 있다.

성경통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미국 스탠포드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림대학교 연구협력처장, 동아일보 객원논설위원,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춘천리포트(공저)』, 『복지국가론(공저)』, 『체제변동의 정치사회학』, 『국민국가개혁론』 등이 있다.